

반월·시화, 화학사고에 가장 “취약”

환경부, 설비 노후화에 상태 불량 ... 3846곳 중 42% 안전관리 부실

국내 유독물 취급기업의 42%가 화학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과 합동으로 3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유독물 취급 사업장 3846곳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에서 설비 노후화, 배관연결 상태 불량, 폭발 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 19개 항목에 대해 취약사항이 1건 이상 발견된 곳이 1620곳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고 6월16일 발표했다.

소화기를 비롯한 개인보호·방재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례 16.1%, 주기적 안전점검 불이행 10.7%, 유독물 누출 차단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례 10.0% 등 안전관리 소홀이 주로 지적됐다.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을 1000톤 이하로 소량 취급하는 중소기업 1914곳의 평균 취약항목 개수는 2.2개로 전체 평균인 1.8개보다 많았으며, 위반항목이 10건 이상 되는 주요 취약기업 103곳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자제품·철강·석유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세척·도금·염색 등 공정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 중 중소 사업장이 많은 반월·시화단지가 화학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산업단지에서 바닥면 방수 균열이나 부식 등 설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방지턱, 누출 차단설비 설치 등 항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중소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밀집해 있고, 부산 외곽은 사업장들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총 6892건의 지적사항 중 주기적인 안전점검 미시행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또 바닥면 방수·균열 개선 등 시설 개선사항은 상반기에, 낡은 설비 교체 등 전반적 설비 개선은 2014년까지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합동 전수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6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7>